

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(1994. 7~9)

1994. 9. 30

南宮鏞(北韓研究室 研究委員)
鄭永泰(北韓研究室 研究委員)
金炳魯(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)
金聖哲(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)
全相仁(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)

民族統一研究院

-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.
-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.

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

目次

I. 概況	1
II. 對南誹謗 持續	4
1. 概觀	4
2. 經過	4
3. 分析 및 展望	9
III. 北·美 3段階 高位級會談 開催	11
1. 概觀	11
2. 經過	11
3. 分析 및 展望	15
IV. 南北經濟交流	16
1. 概觀	16
2. 經過	17
3. 分析 및 展望	20
V. 朝總聯 動向	23
1. 概觀	23
2. 金日成死亡 哀悼 및 金正日에의 忠誠 確認	23
3. 組織強化活動	24
4. 北韓政策 支援	25
5. 日本政府의 反朝總聯 措置	26
6. 展望	27

I. 概況

- 김일성 사망(7.8) 이후 북한은 金正日 후계체계의 공고화와 핵문제를 둘러싼 北·美間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음.
 -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國家主席 및 黨總書記 취임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, 김정일의 權力承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음.
 - 김일성 사망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北·美間 3단계 회담이 재개되어 제1차 회의는 8.5~12까지, 그리고 제2차 회의는 9.23부터 진행되고 있음.

- 1994년도 3/4 분기 북한의 對南戰略 기조는 정권교체에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·비방을 강화하는 것임.
 - 북한은 김일성 사후 남한내 「弔問」 파동을 자극하고 「主思派」 관련 논쟁을 선동함.
 - 北·美會談에 대한 남한의 影響力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문제 및 기타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정부와 金泳三 대통령을 맹비난함.
 - 남한 및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人權問題 제기에 대해 북한은 남한내 未轉向 長期囚들의 북한송환과 國家保安法 철폐 주장으로 맞대응함.
 - 북한은 제5차 「汎民族大會」를 평양에서 강행함(8.13~15).

- 북한은 檀君陵 준공식에 즈음하여 남한의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들을 대거 초청함으로써 남한내 國論分裂을 유도함.
 - 北·美會談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여 북한은 美國에 대한 비난 강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킴.
- 김일성 사망으로 일시 중단된 北·美 3단계 고위급회담 제1차 회의가 8.5 제네바에서 재개되어 「합의성명」을 발표함.
- 「합의성명」의 골자는 북한의 核凍結 약속, 미국의 對北 경수로 및 대용 에너지 제공, 北·美 相互連絡事務所 교환설치 등임.
 - 이어서 北·美 專門家會談(9.10~15)과 3단계 고위급회담 제2차 회의가 9.23부터 개최되어 「합의성명」에 기초한 협상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成果가 없음.
- 經濟交流와 관련하여 북한은 交易規模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, 委託加工貿易을 급증시키고 있음.
- 남북교역의 감소는 북한 核問題에 기인하는 것임.
 - 委託加工貿易의 급증은 국내 임금상승에 의한 남한 기업의 對外競爭力 보완과, 舊社會主義圈 협력체제 붕괴 이후 수출시장 상실에 따른 遊休設備와 저렴한 勞動力을 활용하여 북한이 外貨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.

- 朝總聯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지속적으로 다짐하고 있으나, 조총련 자체의 內紛과 일본경찰의 搜查 등에 의해 그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.
 - 조총련은 김일성 사망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조문단을 파견하고 일본내에서 追悼式을 거행함.
 - 일본경찰은 조총련의 활동과 관련하여 7.27부터 오사카본부 사무실 및 幹部에 대한 수색과 소환·조사를 벌임.
 - 조총련 제1부의장 李珍珪와 책임부의장 許宗萬간의 조직 분규가 증폭되고 있음.

II. 對南誹謗 持續

1. 概觀

- 김일성 사망으로 南北頂上會談 개최가 무산되자 일시적으로 자제했던 對南誹訪을 한층 노골화하였음.
- 미국과의 회담 진행으로 對美非難의 강도는 다소 낮아진 반면, 對南非難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신공격 등 극렬한 비난공세를 전개함.
 - 北·美 3단계 회담 제1차 회의(8.5~12)에서 4개항의 승意在 이루어지고, 9.23부터 진행중인 2차 회담을 의식하여 미국을 필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임.

2. 經過

가. 「弔問」攻勢와 「主思派」煽動

- 북한은 7.14 「조평통」 대변인 談話를 통해 김일성 사망에 대한 남한측 인사들의 「조문단」 방북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남한정부가 「弔問」 금지 조치를 취하자 이와 관련하여 남한정부와 대통령을 격렬히 비난함.
 - 「한민전」 대변인 담화를 통해 “초보적인 예의범절도 모르는 비인간적인 행위”라고 비난함(7.15).

- 남한정부를 “반통일세력”으로 규정하고 “반통일분자들에게 철추를 내려야 한다”라며 ‘현정부타도’를煽動함(8.16 중방).
- “대를 두고 용납할 수 없는 죄악”이라고 비난함(9.21 평방).
- 世界日報 박보희 前 사장의 「조문방북」을 적극 비호하며 「조문단」 파견을 부추김.
- 서강대 박홍 총장의 「주사파」 관련 발언을 “악의에 찬 험담”이라고 비난(8.28 로동신문)하는 한편, 南韓當局의 대학가 주사파조직 수사를 “북남대결을 격화시켜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범죄행위”라고 비방(8.29 중방)하고 주사파들의 “남한정부 타도”를 선동함.

나. 北·美會談 進行 및 人權問題 提起에 대한 맞대응

- 北·美會談에서 남한의 압력행사를 막기 위해 北韓은 핵문제 및 현안문제들에 대해 남한정부와 김영삼 대통령을 맹비난함.
 - 한·일정상회담 비난(7.26 로동신문)
 - 김영삼 대통령의 「정상회담」 합의 유효 언급을 왜곡·비난하는 가운데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김대통령을 비방함.
 - 김대통령의 「8.15」 경축사 비난(8.18)
 - 외교부 대변인, 「을지연습」 관련 韓·美 양국 비난(8.24)
 - 「한민전」 중앙위, 핵개발 관련 「공개질의서」 발표(8.16)

- 김대통령의 만국우편연합(UPU) 21차 총회 치사 비난(8.25)
 - 9.12 김대통령의 미항모 「키티호크」호 방문시 긴밀한 한·미 안보협력관계 발언을 비난함.
 - 9.15 「한민전」 명의로 된 「한국형 경수로 진상공개장」을 발표, 남한이 경수로 문제를 “불순한 목적에 악용하려 한다”고 맹비난함.
- 북한은 8.2 「조선인권연구협회」를 통해 국제사면위원회가 7.30 제기한 北韓 人權問題에 대해 “허위모략”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未轉向 長期囚인 김인서·함세환을 송환하라고 요구함.
 - 귀순자 강명도·조명철을 “범죄자이며 인간쓰레기”로 매도(7.28)함.
 - 고상문(8.10)·유성근(8.11)으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갖게하고 이들의 “자진입북”을 선전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國際的 非難에 대응함.
 - 남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일종의 「맞불작전」으로 김인서·함세환의 北送을 요구함.
 - 미전향 출소자 김영태에 대한 송환을 요구함(9.19 로동신문).
- 拉北者 7명 합동 내외신 기자회견 개최(8.17)
- ‘의거입북자’ 허종만 환영 평양시 군중집회 개최(9.1)

- 人權問題 제기 및 南北交流 요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은 국가보안법 관련 미국무부 논평을 즉각 보도(8.11)하고,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國家保安法 철폐 주장함(8.17).
 - 9.19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명의의 비망록 발표를 통해 美國務部 관리의 ‘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희망’ 발언(2.25, 8.11)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, 현 정부가 “과거 5·6공 정권보다 더 포악한 정권”이라며 文民政府의 도덕성을 맹렬히 비난함.
 - 국가보안법을 남북한의 人的·物的 交流를 차단하는 주된 장애물로 규정하고 제21차 만국우편연합(UPU) 서울총회(8.22~9.14)에서 채택된 「한반도에서의 우편교류에 관한 결의」를 실현하려면 먼저 國家保安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함.

다. 第5次 「汎民族大會」 開催

- 北韓은 8.13~15까지 평양에서 제5차 「범민족대회」를 개최하였음.
 - 공동결의문과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
 - 「90년대의 통일실천 결의집회」, 「조국통일 대토론회」 등의 행사 진행
 - 1만 5천여명이 동원된 「90년대 통일실천 결의행진 및 집회」를 신설, 진행하였음.

- 이번 「범민족대회」에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 처음 개최되는 통일 관련 집회를 이용하여, 김정일 정권의 統一問題에 대한 업적을 대내외로 부각시키고 남한내에서 위축되어가는 反政府 운동권에 통일문제를 계기로 對政府 鬭爭을 촉발, 정국혼란을 조성하고자 함.
 -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“모든 원칙과 방침”을 김일성의 업적으로 돌리면서도 “김정일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”를 강조함으로써 김정일 중심의 투쟁을 부각시켰음.
 - 「남북 인간띠 잇기대회」, 남북공동개최 제의(7.31)가 무산되었고 범민족 서울대회도 성과없이 진행됨.

- 북한의 「조평통」은 8월 12일 이홍구 統一院 長官의 ‘흡수통일’ 관련 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, 이는 “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무효화한 계획적인 행위”라고 주장함.

라. 檀君陵 竣工式 招請 攻勢(9.25)

- 북한은 9.25 檀君陵 준공식(10.11)에 남한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는 서신을 발송함으로써 「弔問」 파동에 이은 「招請」 攻勢를 통하여 남한내 국론분열 및 소모적인 논쟁을 유도 하였음.
 - 북한은 1993.9.28 檀君의 유골과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1년만에 단군릉 復元事業을 완성하였음.

- 북한은 “민족제일주의”에 입각하여 1994.1.31 고려 왕건릉 改建 등 민족문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, 檀君實在說을 통해 고조선-고구려-발해-고려 중심의 한국역사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정권의 正統性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.
- “단군은 조선민족의 원시조이고 오늘의 조선민족은 그의 후예라는 인식”하에 7천만 동포가 “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”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檀君陵 復元事業을 단시일에 마무리지은 것으로 보임.

3. 分析 및 展望

- 북한은 김일성 사후 취약해진 對南戰略을 강화하기 위해 「조문」 공세 및 「초청」 공세로 남한내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攻勢的 對南政策을 지속하였음.
- 북한은 남한측의 이산가족 문제거론이나 러시아 벌목노동자 귀순 허용조치 및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시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남한내 未轉向 출소자들에 대한 送還問題를 제기해 왔음.
 - 국가보안법을 비난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대남 적개심 고취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하였음.

-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난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은 美·日과의 관계개선을 겨냥한 對南主敵 개념 구도에서 전개된 것임.
- 북한은 民族主義的 感情 유발 및 김정일의 통일업적 부각을 통하여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대남정책을 추진하였음.
 - 1984.9 북한의 대남 수재민 구호물자 제공 10주년과 관련하여 이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돌리면서 김정일의 이미지를 민족전체의 지도자 위치로 끌어 올리려고 주력하였음.
 - 흡수통일과 관련한 북한의 과민한 반응과 民族主義 路線의 전개는 남북한의 국력 격차를 의식한 북한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음.

Ⅲ. 北·美 3段階 高位級會談 開催

1. 概觀

- 김일성 사망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北·美 3단계 고위급회담이 8.5 제네바에서 재개되어 「합의성명」을 발표하게 되었음.
 - 「합의성명」의 골자는 북한의 核凍結 약속, 對北 경수로 및 대응 에너지 제공, 北·美 상호연락사무소 교환설치 등임.
- 이어서 北·美 專門家會談(9.10~15)과 3단계 고위급 2차 회담(9.23)이 개최되었으나 北·美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.

2. 經過

- 당초 北·美 3단계 고위급회담은 지난 7.8 제네바에서 개시되었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첫날 회의만 마치고 중단되었음.
 - 이와 관련하여 同 회담 北韓側 代辯人은 7.10 성명을 통해 “北·美 3단계 고위급회담을 장례식 기간 동안 연기할 것”과 “뉴욕의 외교채널을 통해 3차 회담 재개일자를 결정할 것”을 발표하였음.

- 북한은 7.21 뉴욕에서 미국과의 實務者接觸을 통해, 김일성 사망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北·美 3단계 회담을 8.5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.
- 이와 같은 사실을 미국측은 7.22 국무부 대변인 정레 브리핑을 통해, 그리고 북한은 같은 날 외교부 보도를 통해 각각 발표하였음.
- 北·美 3단계 회담 관련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(7.25)문에서 北韓當局은 다음과 같이 밝혔음.
 - “조선반도의 현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문제는 그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성격의 문제이다. ... 3단계 朝·美會談에서 경수로제공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고 조·미 사이의 적대관계 해소, 신뢰조성 문제 등이 해결되어 조·미관계가 실제적으로 개선되면 북남 관계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.”
 - 북한은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北·美會談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北·美關係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핵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.
- 북한과 미국은 8.5~12까지 제네바에서 3단계 회담 1차 회의를 개최하고, 북한 核活動 凍結, 對北 경수로 및 대용 에너지 제공, 상호 연락사무소 교환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「합의성명」을 발표하였음.

- 北·美 「합의성명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북한은 흑연감속로들과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, 미국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2백만 킬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북한에 제공하며 그동안 북한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대체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음.
 - 북한은 경수로와 대체 에너지 제공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은 대가로 5만 킬로와트, 20만 킬로와트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의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실을 봉인하고 國際原子力 機構의 감시밑에 두기로 하였음.
 - 북한과 미국은 정치경제관계의 완전한 正常化를 위한 조치로서 각기 상대방의 수도에 외교대표부(연락사무소)를 설치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하였음.
 - 미국은 북한에 核武器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, 북한은 조선반도의 非核化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된 용의를 표명하였음.
 - 북한은 核擴散防止條約의 회원국으로 남아있으며, 조약에 따르는 안전협정의 이행을 준수할 용의를 표명하였음.
 - 북한과 미국과 회담을 休會하고 9.23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.

-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기자회견(8.13)에서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과 관련하여 “우리는 특별사찰에 대해서 인정해 본적도 없고 절대로 접수할 수 없다. 특별사찰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일부 불순계층들이 꾸며낸 것이고 기구 불공정성의 산물이다”고 못박음으로써 特別査察 수용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음.
- 이어서 북한과 미국은 「합의성명」의 後續措置로 9.10~15 평양과 베를린에서 전문가회담을 개최하여 경수로 교체 지원 문제, 대체 에너지 제공 문제, 과거 핵 투명성 문제 및 연락사무소 설치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나 意見 不一致가 노정됨으로써 北·美 3단계 2차 회담(9.23 개최)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였음.
- 北·美는 3단계 고위급 2차 회담을 예정대로 9.23 개최하여 지난 8월의 「합의성명」에 기초한 협상들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9.30 휴회에 들어감으로써 회담의 交錯狀態를 노정하게 되었음.
- 그러나 北·美는 同 회담을 10.5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음.

3. 分析 및 展望

- 북한은 가능한한 빨리(10월내) 北·美 3단계 고위급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수로 건설지원, 대체 에너지 및 北·美 관계개선 등의 수확을 도출해 내고자 할 것으로 보임.
 -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출범에 있어서 대내외적인 正統性 확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것임.
 - 따라서 지난 9.30 고위급회담이 휴회에 들어갔을 때 북한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(10.5) 재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북한은 核凍結(현재·미래 핵동결) 약속을 넘어서는 요구 즉 과거 핵규명을 위한 핵사찰(특별사찰)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만약 特別査察 요구가 지속될 때 북한은 또 다시 對美 강경태도로 선회할 것으로 판단됨.
 - 이 경우 교체된 핵연봉의 재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큼.

IV. 南北經濟交流

1. 概觀

- 1988.10 南北經濟交流가 시작된 이후 1994.8까지 남북한 교역승인 규모는 7억 8,409만 달러이며, 그중 반입이 7억 1,883만 달러, 반출이 6,526만 달러임.
 - 남북한 交易承認規模는 1988년의 104만 달러에서 1991년 1억 9,217만 달러, 1992년 2억 1,350만 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, 1993년에는 1억 9,879만 달러로 감소하였음.
- 반출입 통관실적은 1991년 1억 1,127만 달러, 1992년 1억 7,343만 달러, 1993년 1억 8,659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였음.
- 1994.8까지의 南北交易 承認實績은 반입 1억 2,000만 달러, 반출 1,120만 달러로서 총 1억 3,120만 달러를 기록, 작년 同 기간 대비 5.6% 감소하였음.
 - 7월까지의 通關實績은 작년 동기간 대비 10.4% 감소한 1억 208만 달러로서 반입 9,289만 달러, 반출 919만 달러임.
- 한편 1994.8까지의 委託加工交易 承認實績은 반입금액 기준으로 54건, 1,158만 6천 달러를 기록, 1993년 총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인 438만 5천 달러를 2.6배 초과하였음.

<표 1> 연도별 반출입 승인 현황(1988.10~1994.8)

연 도	반 입		반 출		계	
	건 수	금액(천\$)	건 수	금액(천\$)	건 수	금액(천\$)
1988	4	1,037	-	-	4	1,037
1989	57	22,235	1	69	58	22,304
1990	75	20,354	4	4,731	79	25,085
1991	328	165,996	40	26,176	368	192,172
1992	365	200,685	42	12,818	407	213,503
1993	478	188,528	76	10,262	554	198,790
(93.1~8)	(295)	(135,422)	(43)	(3,790)	(337)	(139,212)
1994.1~8	361	119,995	73	11,201	434	131,196
총 계	1,668	718,830	236	65,257	1,904	784,087

2. 經過

가. 6月 動向

- 6월중 南北交易 承認實績은 41건, 1,196만 달러이며, 이중 반입승인은 32건, 1,137만 9천 달러, 반출승인은 92건, 58만 1천 달러임.
- 반입품목은 철강금속류가 76.0%(865만 3천 달러)로 주종을 이루었으며, 농·임산물 10.4%, 섬유류 8.0%이며, 반출품목은 위탁가공 원·부자재인 섬유류가 54만 8천 달러로 94.3%를 차지하였음.

- 통관실적은 반입 56건, 1,162만 달러, 반출 20건, 81만 8천 달러로서 합계 76건, 1,243만 8천 달러임.
- 특히 시계, 유리가 최초로 반출통관되었음.
- 委託加工交易 승인실적은 반입금액 기준으로 4건, 54만 달러로서, 지난달 8건, 239만 8천 달러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, 전년 동기 1건, 1만 6천 달러에 비해 33.8배 증가하였음.

<표 2> 위탁가공교역 승인 현황

(단위: \$)

연 도	건 수	반 입	반 출
1991	1	22,880	13,406
1992	10	556,076	413,635
1993	44	4,384,634	3,610,788
소 계	55	4,963,590	4,037,829
1994. 1	6	1,809,747	996,412
2	9	970,080	511,336
3	12	1,342,520	984,789
4	7	3,100,467	2,312,576
5	8	2,398,313	1,669,684
6	5	551,691	443,079
7	3	550,121	360,044
8	5	862,622	603,411
소 계	54	11,585,561	7,881,331
총 계	109	16,549,151	11,919,160

나. 7月 動向

- 7월중 南北交易 承認實績은 52건, 2,047만 달러이며, 이중 반입승인은 47건, 1,955만 9천 달러, 반출승인은 5건, 91만 2천 달러임.
- 반입품목은 금괴, 아연괴, 열연코일 등 철강금속류가 85.2%(1,666만 5천 달러), 농·임산물 6.3%, 섬유류 6.1%였으며, 반출품목은 위탁가공교역 원·부자재를 포함한 섬유류가 97.4%(88만 8천 달러), 기타 신발갑피가공을 위한 신발부분품이 2.6%(2만 4천 달러)였음.
- 7월중 通關實績은 71건, 1,968만 9천 달러로서, 반입은 59건, 1,913만 달러, 반출은 12건, 59만 8천 달러임.
- 委託加工交易 승인실적은 3건, 55만 달러로서(반입금액기준)로서 지난달에 비해 9.1% 증가하였고, 전년 동기 실적인 6건, 67만 달러에 비해서는 17.9% 감소하였음.
 - 1994년도 수요물량은 겨울철 수요물량까지 이미 발주가 끝난 상태여서 6월 이후 승인실적이 다소 저조함.

다. 8月 動向

- 8월중 南北交易 承認實績은 61건, 1,462만 8천 달러이며 이중 반입승인은 49건, 1,384만 5천 달러, 반출승인은 12건, 78만 3천 달러임.

- 반입품목은 철강금속류가 77.5%(1,073만 1천 달러)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, 그 다음으로 수산물 7.7%, 섬유류 6.9%였으며, 반출품목은 면혼방직물 등 섬유류가 72만 7천 달러로 92.2%, 기계류가 3.8%였음.
 - 단추제작용 기계류 3종이 최초로 반출승인되었음.
-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은 5건, 86만 3천 달러로서, 지난달에 비해 56.7% 증가하였음.

3. 分析 및 展望

- 1994년 8월까지의 南北交易은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① 交易規模 감소, ② 搬出 증가, ③ 委託加工交易의 급증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.
- 交易規模와 관련, 1994년 들어 8월까지의 남북교역실적은 승인기준으로 434건, 1억 3,120만 달러로 1993년 동기의 337건, 1억 3,921만 달러에 비해 5.8% 감소하였음.
 - 통관실적(7월까지) 역시 465건, 1억 208만 달러로 전년 동기 406건, 1억 1,389만 달러에 비해 10.4% 감소하였음.

- 交易收支와 관련, 그간의 남북교역은 대부분 반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, 1994년 들어 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반출이 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.
 - 1993년 남북교역 중 반출비중은 승인기준으로 5.2%, 통관기준으로 4.5%에 불과하였으나, 1994년 들어 8월까지의 반출비중은 승인기준 8.5%, 통관기준 9.0%로 증가하였음.
 - 이는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원부자재의 반출이 증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.

- 한편 남북교역은 委託加工交易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.
 - 1994년 들어 8월까지의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은 1,158만 달러로서 남북간에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된 1991년 이후 1993년 말까지의 총 위탁가공교역 승인 실적(496만 달러)의 약 2.3배임.
 - 이와 같은 위탁가공교역의 대부분은 의류·신발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바, 이는 북한이 새로운 經濟戰略으로 강조하고 있는 「경공업제일주의, 무역제일주의」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.

- 남북교역은 1994년 8월 말 현재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交易規模에서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바, 향후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한 교역은 2억 달러 전후의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- 그러나 핵문제 등의 정치·군사적 梗塞關係에도 불구하고 임가공교역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급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, 임가공교역분야는 향후 남북한교역의 주요 형태로 등장할 것이며 南北經濟協力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매우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특히 국내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이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委託加工交易 활성화는 남한 기업들에게는 해외진출을 하지 않고도 대외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, 북한으로서도 舊社會主義圈 협력체제 붕괴 이후 수출시장 상실로 야기된 遊休設備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은 향후에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.

V. 朝總聯 動向

1. 概觀

- 조총련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있으나, 제1부의장 李珍珪와 책임부의장 許宗萬간의 분규,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동요, 일본경찰의 오사카본부 간부 소환·수사 등으로 그 조직체계가 전례에 없이 沈滯狀態에 있는 것으로 보임.

2. 金日成 死亡 哀悼 및 金正日에의 忠誠 確認

- 조총련은 김일성 사망과 관련 7.9 김정일에게 弔電을 보내 김정일을 중심으로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그를 “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,” “탁월한 영도자”라고 찬양함.
- 김일성 장례에 참석하기 위한 조총련 弔問團(단장 사무총국 부총국장 정광수) 1백25명이 만경봉 92호로 7.15 원산항을 통해 入北, 7.23 니가타항에 귀항
 - 조문단의 대부분은 조총련의 간부 및 지방대표들임.
 - 조문단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에서 權力承繼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함.

- 한편, 조총련은 7.17 중앙과 지방에서 일제히 김일성 사망 追悼式을 거행함.
 - 도쿄에서는 제1부의장 李珍珪(추도위원장)를 비롯한 간부 및 동포들이 대거 참석함.
 - 이진규는 김일성을 재일동포의 “생명의 은인”으로 묘사한 다음 김정일을 ‘수령’으로 받들어 나갈 것을 다짐함.
 - 또한 평양에서의 김일성 영결식과 때를 같이하여 조총련은 7.19 도쿄의 중앙본부에서 이진규의 주도로 별도의 영결식을 가짐.

3. 組織強化活動

- 조총련은 「재일본조선청년동맹」(朝靑) 결성 39주를 맞아 조총련계 청년들의 金正日 중심 단결을 강조함.
 - 朝靑은 만15~28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총련 산하 청년단체로서 1955년 8월 1일 결성되었음.
- 조총련은 조직강화를 위해 「10만호 동포방문담화운동」과 「5호담당 체계」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음.
 - 지역별 대규모 강연회와 분회별 좌담회, 간담회 등으로 同胞訪問談話運動을 전개하고 있음.
 - 또한 북한의 「5호담당제」를 援用하여 정보교환의 신속을 기하고 있음.

- 「조선신보」 9.13에 의하면, 조총련은 또한 각 지부별로 「어머니마당」을 결성하여 民族教育과 女性同盟組織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.
 - 사업내용은 자녀들에 대한 교양사업, 애국과업의 수행 및 조직 강화, 동포여성들의 단결도모 등임.
 - 이를 위해 강연회, 심포지움, 좌담회 등 공식적 교양행사 뿐만 아니라 식사모임, 문화교실, 요리교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총련계 여성들을 동원하고 있음.

- 그러나 조총련 일탈자들은 조총련의 장래에 대해 悲觀的으로 전망하고 있음.
 - 소설가 김석범은 “조총련은 지금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하다”고 표현함.
 - 제일동포 3세로서 조선사회과학원 유학생 출신인 이영화는 조총련의 核心勢力은 金父子 「학습조」로서 총회원의 1/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생계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분석함.

4. 北韓政策 支援

- 조총련 기관지 「조선신보」는 合營法 제정(1984.9.8) 10주년을 맞아 「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」를 중심으로 「나진·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」의 개발사업에 발맞추어 商工人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촉구함.

- 韓國政府의 主思派 척결방침에 대해 조총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(8.4) 애국세력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파쇼통치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함.
- 김정일은 북한 정권수립(9.9) 46주를 맞아 「교육원조비 및 장학금」 1억엔을 金正日 명의로 송금함.
 - 지금까지 주요행사시 김일성 명의로 1백27차례 성금한 바 있으나, 김정일 명의로 송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.

5. 日本政府의 反朝總聯 措置

- 일본 오사카 경찰본부는 지난 4.15 「북한 민중을 돕는 긴급행동 네트워크」(RENK)라는 시민단체의 집회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, 조총련 오사카본부 간부 20여명을 7.27부터 소환·수사함.
 - 이미 日警은 진상조사를 위해 4.25 오사카본부 등 8개 건물을 押收搜索하였으며, 이번 수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일련의 절차임.
- 그러나 김일성 사후 취해진 이번 수사는 일본정부의 對朝總聯 強硬對應 방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.
 - 지난 4.25 수색시 상당량의 경리장부를 압수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아 對北送金 관련사항도 조사하는 것으로 판단됨.

6. 展望

- 김일성 추도분위기가 가라앉고 金正日 政權의 공식출범이 있게 되면,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사상교양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 제1부의장 李珍珪와 책임부의장 許宗萬간의 조직분규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, 김정일이 이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분석됨.
 - 조총련은 對北韓 재정지원의 중요한 해외거점으로서 최소한의 自律性을 가질 수 있는 조직임. 따라서 許宗萬이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許로 하여금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게 하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.

빈 면

● 發刊資料目錄案內 ●

〈세미나시리즈〉

- 91-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
- 91-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: 實相과 展望
- 91-03 北韓體制的 變化: 現況과 展望
- 92-01 南北和解·協力時代, 우리의 座標와 課題
- 92-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
- 92-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
- 92-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
- 92-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: 現況과 展望
- 93-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
- 93-02 北韓 核問題: 展望과 課題
- 93-03 中國의 改革·開放
- 93-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
- 93-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
- 94-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
- 94-02 南北韓關係와 美國
- 94-03 예멘 統一의 問題點

〈研究報告書〉

- 91-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
- 91-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
- 91-03 美國聯邦制 研究: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

- 91-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
- 91-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: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
- 91-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
- 91-11 在野統一案 研究
- 91-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화와 東北亞秩序 改編: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(I)
- 91-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
- 91-14 「한민족공동체」 具體化方案 研究: 社會·文化·經濟 交流·協力 中心
- 92-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
- 92-02 中國의 改革·開放 現況과 展望: 北韓의 中國式 改革·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
- 92-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: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
- 92-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: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(II)
- 92-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
- 92-06 軍備統制 檢證 研究: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
- 92-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
- 92-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
- 92-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
- 92-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
- 92-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
- 92-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: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

- 92-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
- 92-14 南北韓 社會·文化共同體 形成方案：社會·文化的 同質性
增大方案 中心
- 92-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
- 92-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
- 92-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
- 93-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
- 93-02 金日成著作 解題
- 93-03 日本의 對北韓政策
- 93-04 中國의 改革·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：1990年代 東北亞
秩序 豫測(IV)
- 93-05 中·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
- 93-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
－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(Ⅲ) －
- 93-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
- 93-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
- 93-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
- 93-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·러시아 關係
- 93-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
- 93-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
- 93-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
- 93-15 金正日著作 解題
- 93-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：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
과 관련하여

- 93-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
- 93-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
- 93-19 예멘 統合事例 研究
- 93-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: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
- 93-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
- 93-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
- 93-23 社會主義體制 改革·開放 事例 比較研究
- 93-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(改訂版)
- 93-25 「한민족공동체」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
- 93-26 日本의 核政策
- 93-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
- 93-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
- 93-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
- 93-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(1945~1993)
- 94-01 北韓 官僚腐敗 研究
- 94-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
- 94-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
- 94-04 中·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
- 94-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
- 94-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
- 94-07 金正日 리더쉽 研究
- 94-08 北韓 民族主義 研究
- 94-09 金正일의 權力基盤 研究

94-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

94-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

〈統一情勢分析〉

91-01 韓·蘇, 日·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: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
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

91-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

91-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: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
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

91-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(IPU) 平壤總會 結果分析

91-05 中·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

91-06 北·日, 北·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

91-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

91-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

91-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

91-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

91-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
分析

91-12 美·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

91-13 美·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

91-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
에 미치는 影響

- 92-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: 南·北韓
關係와 관련하여
- 92-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
- 92-03 中國의 改革·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
- 92-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·러關係 展望
- 92-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: 1992年 上半期
- 92-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
- 92-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: 開發代案 및 法制度
中心
- 93-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: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
- 93-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
- 93-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3. 1~6)
- 93-04 「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」과 北韓의 對南
政策
- 93-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
- 93-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3. 7~9)
- 93-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
- 93-08 第5次 亞·太經濟協力體(APEC) 會議을 契機로 본 亞·太
地域協力の 展開方向
- 93-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
分析
- 94-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—北韓 核問題와 美·北 關係改善을
中心으로
- 94-02 中國의 對北韓政策: 現況과 展望
- 94-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—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
중심으로

- 94-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·外政策 展望
- 94-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
- 94-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
- 94-07 韓·日, 韓·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
- 94-08 북한의 대남동향 분석(1994. 1~3)
- 94-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
- 94-10 韓·러關係 定立方案: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
- 94-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
- 94-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
- 94-13 무라야마(村山)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
- 94-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4. 4~6)
- 94-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
- 94-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4. 7~9)

〈世界主要事件日誌〉

- 91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1. 4. 1~1991. 6. 30)
- 91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1. 7. 1~1991. 9. 30)
- 91-03 世界主要事件日誌(1991. 10. 1~1991. 12. 31)
- 92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2. 1. 1~1992. 3. 31)
- 92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2. 4. 1~1992. 6. 30)
- 92-03 世界主要事件日誌(1992. 7. 1~1992. 9. 30)
- 92-04 世界主要事件日誌(1992. 10. 1~1992. 12. 31)
- 93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3. 1. 1~1993. 3. 31)
- 93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3. 4. 1~1993. 6. 30)

- 93-03 世界主要事件日誌(1993. 7. 1~1993. 9. 30)
 93-04 世界主要事件日誌(1993. 10. 1~1993. 12. 31)
 94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4. 1. 1~1994. 3. 31)
 94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4. 4. 1~1994. 6. 30)
 94-03 世界主要事件日誌(1994. 7. 1~1994. 9. 30)

〈年例情勢報告書〉

-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: 1991~1992
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: 1992~1993
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: 1993~1994
 94-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

〈論叢〉

- 統一研究論叢 創刊號(1992. 6)
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(1992. 12)
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(1993. 7)
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(1993. 12)
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(1994. 8)
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. 1
 (1992)
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. 2
 (1993)

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
special edition(1993)

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. 3
(1994)

한독 WORKSHOP :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
UNIFICATION(1993)

한·미·일 WORKSHOP :

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AND U.S.-JAPAN-
SOUTH KOREA RELATIONS (vol. 1)

KOREAN PENINSULA ISSUES AND U.S.-JAPAN-SOUTH
KOREA RELATIONS (vol. 2)

KOREAN PENINSULA TRENDS AND U.S.-JAPAN-SOUTH
KOREA RELATIONS (vol. 3)

〈資料〉

- 92-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(國文篇)
- 92-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(外國語篇)
- 93-01 藏書目錄: 單行本·研究報告書
- 93-02 藏書目錄: 特殊資料
- 93-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
- 94-01 貨弊·經濟·社會統合에 관한 條約(上)

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(1994. 7~9)

統一情勢分析 94-16

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

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

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-19

전화 : 237-9288, FAX : 232-5341

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: 266-0892

印刷日 1994年 10月 日

發行日 1994年 10月 日
